

[토론회]

#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 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30일(화)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

##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주관 및 후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 개요

일시 : 2024. 4. 30. (화)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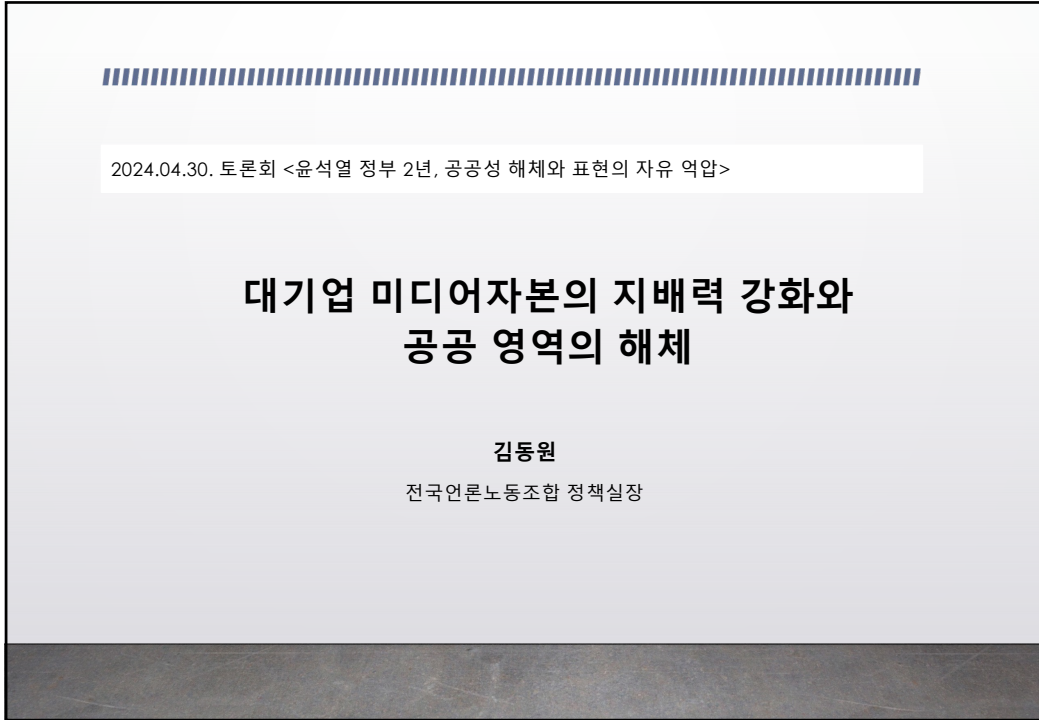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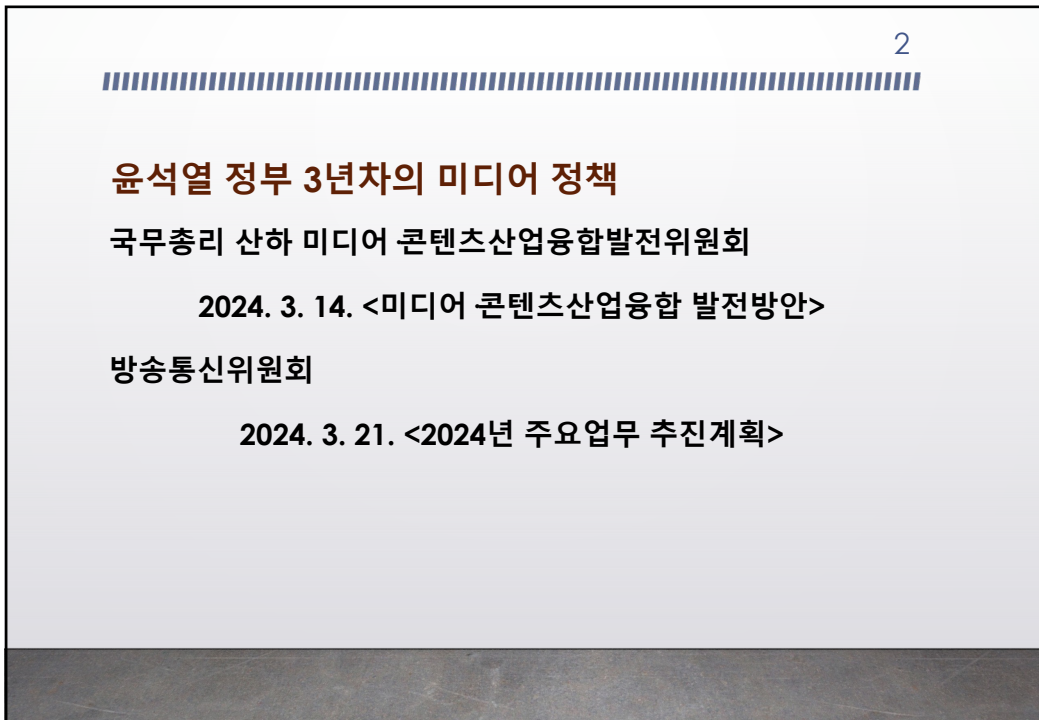
주관 및 후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개회 및 인사말	14:00 - 14:10	사회 :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인사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발제 1 및 토론	14:10 - 15:10	<b>&lt;대기업 미디어 자본 지배력 강화와 공공 영역의 해체&gt;</b> 발제 :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 : 정수영(언론학 박사), 이준형(21조넷), 김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발제 2 및 토론	15:10 - 16:10	<b>&lt;표현의 자유 위축과 심의의 정치 도구화&gt;</b> 발제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 : 박성우(우송대학교), 손지원(오픈넷),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1인
폐회	16:10	



1



2

3

---

###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분석의 기본 틀

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	AUDIENCE
CJ ENM NAVER-KAKAO 공인영 자상원 방송 종편+보도채널 편협한 권력자 개인 사찰자 광고·협찬주	글로벌 OTT: Netflix, Goggle, Meta 국내 OTT: Coupang, Wavve, TVing 포털 서비스: NAVER, KAKAO 유료방송 플랫폼: SO, SkyLife	KT SKT LGU+	SAMSUNG APPLE LG	Regional Local Global
<b>직접 진흥:</b> 예산 지출 • 투자 촉진(펀드 조성, 세제 혜택, 정부 보증) • 인력 양성 • 인프라 구축				
<b>간접 진흥/ 규제 완화:</b> 진입(인허가, 소유 경영) 규제 • 시장(경유율 등) 규제 • 내용(편성) 규제 • 광고 규제 완화 또는 폐지				
<b>규제 강화:</b> 내용(심의) 규제 • 진입 규제 • 시장(거래) 규제 • 지적 재산권 보호 • 소비자 권리(개인 정보) 보호				
<b>무의사결정:</b>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의 필요한 부문에 대한 규제 • 진흥 정책의 부재				

3

4

---

###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 주요 과제

주제/주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융합산업발전위
법제 개편 규제 완화	통합미디어법(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추 진 주파수 및 서비스 효율화(구조조정)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소유 경영 규제완화 편성 광고 규제 완화	인허가제 규제 완화 소유경영 규제 완화 광고 규제 완화 중소·지역방송 경영 규제 완화(광고 및 외주 편성 규제 완화)
공정경쟁 체제수립	통신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	외주사, 창작자, 종사사 권리 보호
산업발전	OTT·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완화	K콘텐츠 수출 지원 콘텐츠 제작과 AI 기술 접목 지원
미디어공공성(?)	플랫폼(포털) 제휴평가위 공정성 강화 자율규제 및 팩트체크 강화 방송심의 제재 강화·반복 위반 제재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

###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 투자 촉진

- 세제 혜택: 세액 공제율 확대
- 투자 촉진
  - 모태펀드에서 미디어전략펀드(모펀드+민간자금)
    - 정부재정 8백억원 + 민간자금 4천억원
    - 콘텐츠 IP 펀드 및 OTT 특화 제작지원(OTT 공동보유 의무)
  -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 IPTV 3사의 iPICK을 통한 투자 유도 및 제작지원 연계

#### • 인프라 구축

- IP 콘텐츠 관련 인프라
  - IP 인프라 구축
    - 융복합 클러스터(고양), 수출거점(상암) 지원
    - IP 관련 펀드 확대 및 IP 지원 사업 강화
- 첨단 제작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 버추얼 스튜디오,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역센터 확대

###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 예산 지출

- 제작 및 수출 보증
  - 콘텐츠 IP 보증, 수출특화 보증, 완성보증, 이자 지원
- AI 기술 활용
  -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기술 접목 강화
    - 생성형 AI 활용(각본, 영상 편집, 무인 중계 등)
    - 영상추천, 화질개선, 실시간 압축 전송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 지역 방송사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및 교류 협력 지원

#### • 예산 지출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EBS 중학프리미엄 및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 EBS, 지역 중소방송,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345억 원)
    - 아리랑 국제방송, KBS 대외방송 제작·송출 지원(242억 원)

7

##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 평가

#### IP 보유 및 확보 가능한 대기업 지원 진흥 정책

- 영상 콘텐츠의 오리지널 IP 확보는 크리에이터 육성에서 시작하는 중장기 로드맵 필요
- OTT 콘텐츠의 다수가 웹툰 IP를 기반으로 함. 웹툰 IP의 다수 보유 사업자는 포털의 엔터 자회사들
- IPTV 3사의 공동콘텐츠 수급브랜드 IP를 통한 투자 유도
- IP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제작사 및 포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미디어전략펀드, 제작 및 수출 보증 등 지원

#### 인프라 지원 정책은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방?

- 융복합클러스터, 수출거점 등의 인프라 구축 지역은 기존 지역의 재활용

#### 공적 콘텐츠 지원은 제자리 걸음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과 중소 지역방송 제작 지원 모두 전년 대비 제자리

7

8

##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 진입 규제 완화

- 재허가(승인)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재허가(승인)제 폐지
  - 지상파 중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과 원칙 사전 명시(기본계획)
    - 부관 부가 사유 공개
-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GPD 일정 비율과 연동
  - 일반PP, 홀소핑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 지상파방송간 경영, 지상파-케이블 간 경영 상한 완화
    - MBC는 제외

### • 내용(편성) 규제 완화

- 제작원·장르별 의무 편성 완화
  - 1개국 수입물 및 오락물 편성 규제 폐지
  -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완화
    - 지역M(20% 이상), 지역민방(3.2% 이상) 대상 완화
- 중소 케이블TV 지원
  - 한시 허용 중인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 제도화 추진

8

9

---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광고 규제 완화
  -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 프로그램 내/외, 기타광고로 단순화
    - 프로그램별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20% 이하) 제한 완화
  - 품목별 광고금지·제한 규제 완화
    -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금지 단계적 완화
      - 조제유류,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등
  -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검토
    - 미디어업사의 방송 연관 온라인 광고 결합판매 허용
- 광고 규제 완화
  - 타이틀 스폰서십 도입
    -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사용 단계적 허용
      - 지역R 프로그램의 정부공공기관 제목협찬 우선 허용
  - 일부 방송사만 해당되는 제작협찬 규제 폐지 검토

9

10

---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평가
  - 방송사업자의 규제완화 요구를 그대로 반영
    - 재허가(승인)으로 규제해야 할 공적 책임 부여와 소유/경영 분리 원칙 폐기
    - 유류기간 확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이행조건 점검 방안이 필요
    - 사업평가 및 계획 심사 이전 부관 부가 조건 원칙 공개의 모순
  - 사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소유 경영 규제 완화
    - 사주의 지위재(관계재) 확보를 위한 방송 소유 방침
    - 모기업의 경영상태 악화에 종속되는 방송사 지위 위험성 증가

10

##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 평가

#### □ 자체제작 비용 축소 허용

- 제작원 장르별 편성 규제 완화에 따른 구매물과 재방 비율 증가
- 중소·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동기 부여 축소

#### □ 미시적 광고규제 완화

- 수요측(광고주)보다 공급측(방송사) 중심의 뒤늦은 정책
- 방송광고시장 자체의 위축 대응 방안 부재
  -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의 난관: 방송사의 수수료 부담, 미디어렙 조직의 인터넷 광고 영업 역량 부재
- 타이틀십 스폰서 도입에 따른 협찬물 확대 및 제작 역량 축소 위험
-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 위헌 및 중소·지역방송 광고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 부재

## 콘텐츠 영역: 규제 강화

### • 공정한 환경 조성 및 권리보호 강화

#### □ 외주제작사 및 종사자 관련

-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불공정행위 금지행위로 포함
- 방송사-외주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분쟁위원회 실효성 강화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노무 법률 관련 컨설팅

#### □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

- 유료방송플랫폼-PP 간 콘텐츠 사용료 관련 기준 마련
  - 산정기준: 사용자 산정 고려요소, 지급 총액 등
  - 선계약-후공급 원칙

### • 내용 규제 강화

#### □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 현행 17개 심의규정 구체화
  - 주관적 해석, 모호한 규정의 조항 구체화
  -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 조정

#### □ 방송의 공정성 심사 평가 강화

- 12월 KBS1DTV, MBC DTV 재허가 심사 적용
- 방송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등 공적책임 평가 강화
  - 위반시 감점 확대, 공정성 평가항목 추가 발굴
-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 제재 강화(하반기 심사)



### 콘텐츠 영역: 규제 강화

#### • 공영방송 공적책임 공공성 강화

- 수신료 징수제도 안착 지원
  - 공영방송의 안정된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 마련
  -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
- 공적 책임 강화
  -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협약제도
  -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시 적극 검토 및 지원

### 콘텐츠 영역: 규제 강화

#### • 평가

- 반복되나 성과없는 공정환경 조성
  - 방송사-외주사 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은 이행 실패 파악이 우선
  - 약 3년 간 5기 방통위에서 시행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개 우선
- 방송심의를 통한 내용 규제 강화
  - 심의규정의 구체화와 공정성 객관성 평가 강화는 모순
  - 하반기 재허가 사업자(KBS1TV, MBC) 대상 표적 심의 예고
  - 방통위 자율규제 연구용역 결과 공개 필요

### 콘텐츠 영역: 규제강화

#### • 평가

#####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방안 부재

- 분리고지를 통한 수신료 재원 축소는 비가역적 재원 축소
- 정부 예산(기금)을 통한 재원은 정부 통제만 강화
-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에 통합 징수하는 방안 등 실행가능한 대안 준비 필요(22대 국회)
  - IPTV 3사의 방송통신결합판매로 인한 유료방송 월정액 수신료 축소
  - 유료방송 가입자의 공영방송 수신료 '이중 납부'라는 문제 제기에 합리적 징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플랫폼 영역: 직접 진흥

#### • 국내 OTT의 해외진출 다각화

- OTT-콘텐츠 협력형 글로벌 진출 확대
  - 국내 스마트TV 내장 FAST 채널에 국내 OTT 콘텐츠 제공
  - ICT 진출 해외 거점 연계 활용
    - 현지 OTT-IPTV 간 계약, 스마트TV+OTT 결합형 진출 지원
- 글로벌 홍보 및 유통 등 통합 지원
  - 글로벌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 국내 OTT 해외 홍보: Global OTT Awards, 국제OTT포럼

#### • 미래 미디어 육성

-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육성
  - 가상환경 3D 제작 공간(스튜디오 등) 구축
  - 엔터테인먼트 방송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 메타버스 유망 기업 및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17

---

### 플랫폼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일반PP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
    - 일반PP 전체매출 49% 이하 제한 폐지
    - SO, IPTV 전체 가입자수 1/3 제한 폐지
-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 70개 채널운용 의무 폐지
    - 현행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는 사업자 채널 편성권 제약
    - 다양성 지역성은 사업자 자율 준수, 결과 공표

17

18

---

### 플랫폼 영역

- 평가
  - 통신3사의 무한 경쟁 허용
    - IPTV의 전체 가입자수 제한 폐지는 딜라이브 인수, 방송통신결합판매 경쟁을 더욱 격화
    - 채널 운용 의무 폐지는 IPTV 3사의 채널 편성권력을 더욱 강화
    - 유료방송플랫폼-PP 간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 무력화
    - 국내 미디어 시장 내 통신3사의 지배력 더욱 강화
  - 글로벌 콘텐츠 육성과 국내 OTT 육성 중 어디에 집중?
    - IP 보유 가능 대기업과 자본력을 갖춘 통신3사에 대한 콘텐츠 지원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IP 독점 방지 및 국내 콘텐츠 편성 요구 등의 대응책 부재
    -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국내 OTT에 대한 대책 부재: 글로벌 가입자 확대?
    - 넷플릭스 망사용료 부과 관련 소송 등 글로벌 OTT 전략에 대한 분석 부재

18

19

---

###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의 기초

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	AUDIENCE
CJ ENM NAVER•KAKAO 공·민영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방송 콘텐츠 제작사 개인 사업자	글로벌 OTT: Netflix, Goggle, Meta 국내 OTT: Coupang, Wavve, TVing 포털 서비스: NAVER, KAKAO 유료방송 플랫폼: SO, SkyLife	KT SKT LGU+	SAMSUNG APPLE LG	Regional Local Global
광고•협찬주	IPTV: KT•SKB•LGU+	가정자 점유율 배치	스마트TV 플랫폼 콘텐츠 제공	소비자 관리보호
인허가•소유•경영 규제 완화				
세계화•민도조정 편성 규제 완화	채널운용 의무 폐지 SO 지역채널 커머스 허용			
국내 OTT•콘텐츠 권소사업 지원 AI•메타버스 활용 지원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심의) 규제 강화	알고리즘•허위조작정보 대응			허위 조작 정보 대응

19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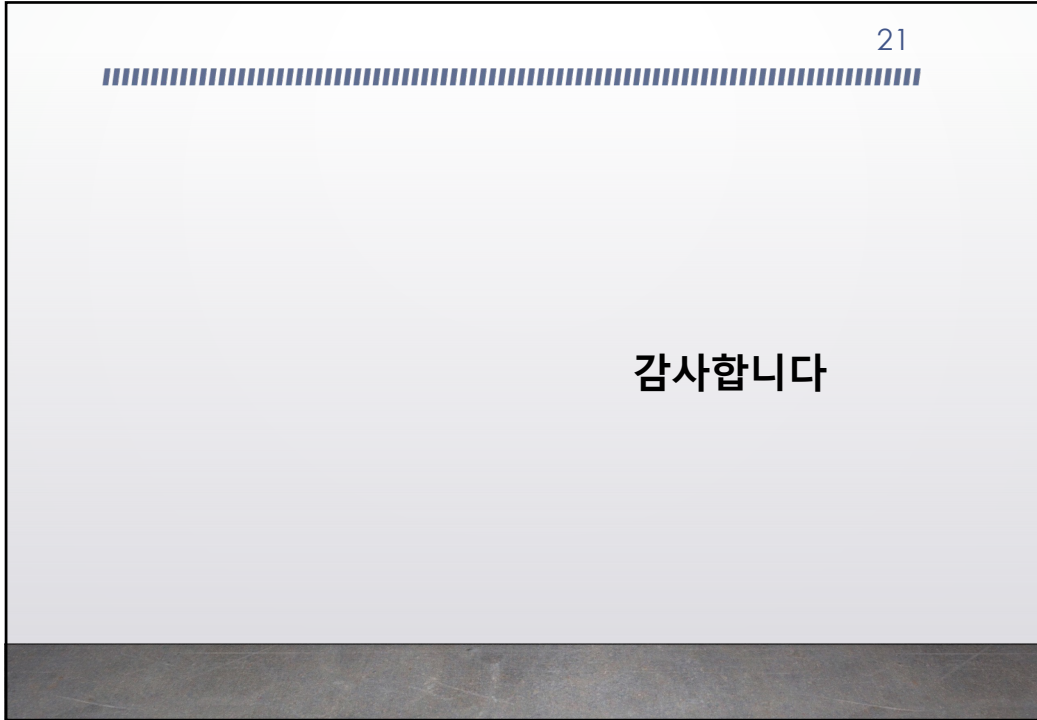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의 기초

- 통신3사가 주도하는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에 필요한 규제 및 진흥 영역 콘텐츠로 확대
- IP 보유 네이버•카카오 플랫폼의 콘텐츠 지배력 강화 지원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정책 없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K-콘텐츠 육성 전략
- 보도기능의 콘텐츠•플랫폼 부문에는 내용 규제 강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분산된 규율체제의 통합 계획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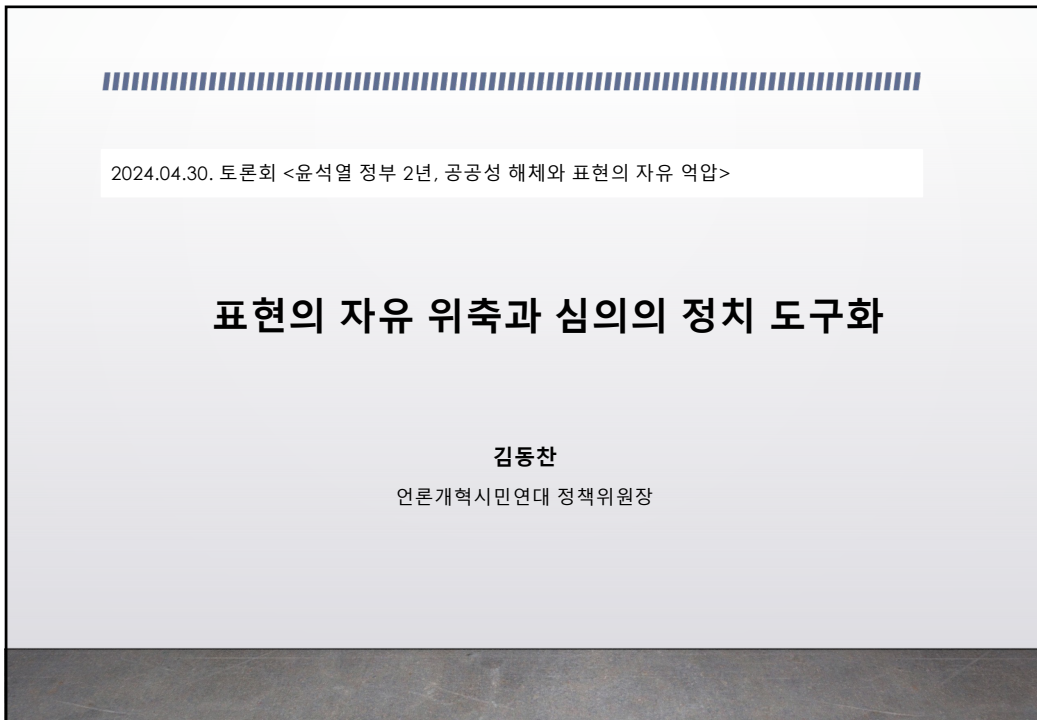
미디어 대기업의 정책 로비에 포획된 규제체제

5기 방통위에서 진행된 시청각미디어법(가칭) 등 규제·진흥 및 각종 위원회의 재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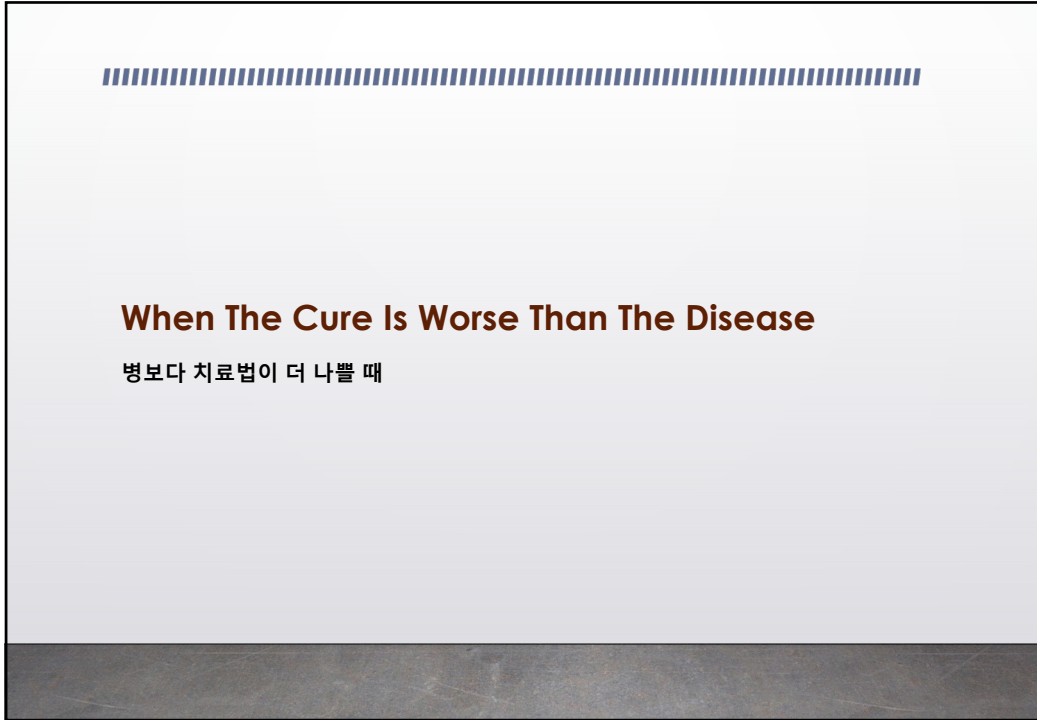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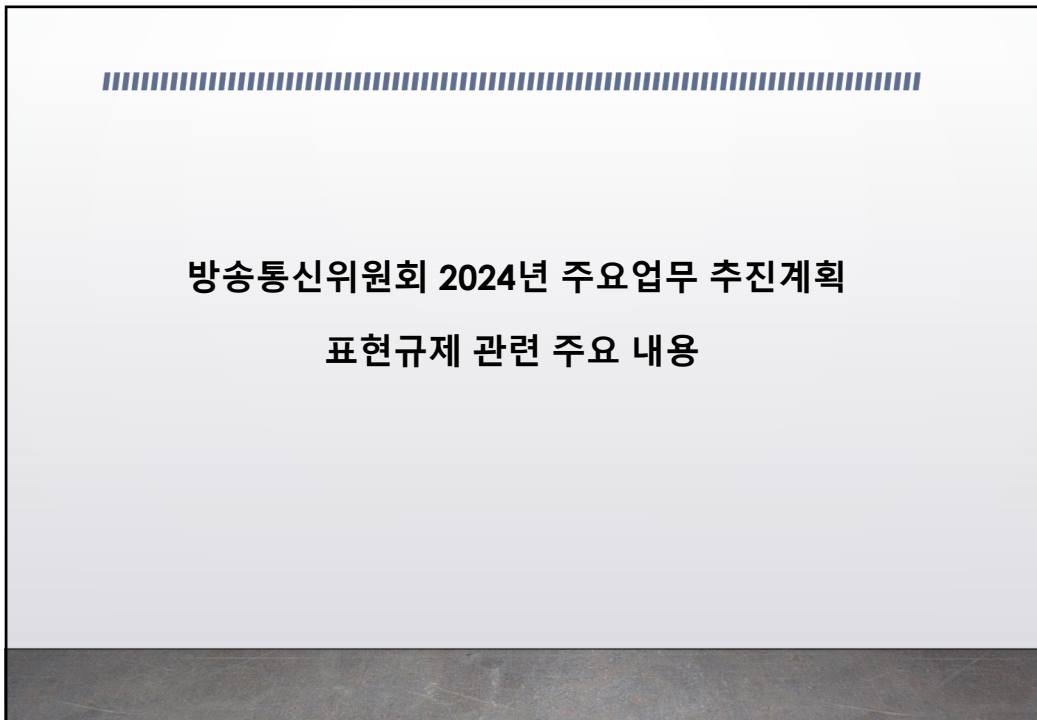
21



22



23



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표현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뉴스플랫폼

• 주요 정책 성과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불법유해정보 등 유통 방지

(가짜뉴스 대응) 사회적 피해 유발 증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방심위·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자 **자율규제\*** 도입('23.9월)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23.10월~)

\* 긴급한 재난상황, 중대한 공익 침해 등 증대한 가짜뉴스에 한해 방심위 요청 시 해당 콘텐츠에 '방심위 심의중' 표시 또는 **자사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등 자율조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표현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뉴스플랫폼

• 주요 정책 성과

□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포털·글로벌사업자 조사)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한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23.9월~) 등 엄격한 법 집행 강화

• 미디어 환경 분석

□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요구 증대

○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 사업자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 및 신뢰성·투명성 약화 등 사회적 논란 심화\*

\*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 및 특정 언론사 부당한 차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실시 중('23.9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표현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뉴스플랫폼

• 2024년 핵심 추진 과제

□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확보

○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

○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사업자(포털, OTT 등)의 자율준칙 시행,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공개 등 추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표현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뉴스플랫폼

• 2024년 핵심 추진 과제

□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허위조작 정보 정의,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및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

○ (자율규제 활성화) 플랫폼사의 모니터링·신고 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

※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되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체계 조기 구축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표현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방송심의

• 2024년 핵심 추진 과제

□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추진

○ (심사 제도 개선)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검토

- '24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추진

\* (재허가) KBS1DTV 등 12개사 146개 방송국 (12월) / (재승인) YTN·연합뉴스TV(3월), 채널A(4월)

□ 방송평가 개선 및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

○ (방송평가 제도 개선) 공정성·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 변별력이 낮고 형식적인 평가항목 조정 등 평가제도 개선 추진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 확대, 공정성 평가항목 추가 발굴 등

○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 제재 강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 강화('24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표현규제 정책 검토

### (1) 포털 규제의 동기 및 추진 과정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인위적 개입 및 특정 언론사 부당한 차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실시 중('23.9월~)



### (1) 포털 규제의 동기 및 추진 과정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 □ 검증

- 보수언론 죽이기인가? 당시 네이버 언론사 인기도 순위 자료를 보면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만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님.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는 2위 → 12위로, 경향신문도 8위 → 18위로 하락. 박성중 의원과 TV조선은 MBC가 6위 → 4위로 상승한 것만 부각함.
- 알고리즘은 왜 변경되었나? 네이버는 언론사가 외부 사이트에서 인용되는 정도를 파악해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인기도 척도'를 운영했는데, 기존엔 사이트 기준으로 인기도를 측정해 대형언론의 경우 계열사도 함께 추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메인 기준이 아닌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기사 본문 내의 언론사 인용 횟수를 적용하는 개편을 실시. (2021년 8월)
- 전문가 평가는? 제2차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2021년 8월~2022년 1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에서 추천을 받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언론사의 이념과 성향을 분류하여 우대하거나 제외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언론 시장에서 온라인 이슈 대응 역량을 갖춘 대형 언론사들이 계열사를 비롯,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특정 이념 성향의 언론사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자 경험 차원에서는 특정 성향 언론사 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1) 포털 규제의 동기 및 추진 과정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 과정

- 2023.01.03.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60억 원의 뒷돈을 대고 '뉴스 영역'에 판을 깔아준 SNU팩트체크센터, 한국언론학회의 팩트체크 사업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
- 2023.01.27.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중국인들이 네이버에서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포털 댓글 국적 표기법' 발의
- 2023.03.28.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2023.04.03.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포털 기사 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법 발의
- 2023.04.19. 윤석열 대통령, 4.19 추도사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 위협하고 있다"
- 2023.04.2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설치
- 2023.05.09.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내일이 취임 1주년인데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 뉴스는)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
- 2023.05.12.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문체부 장관의 포털 뉴스서비스 조사권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1) 포털 규제의 동기 및 추진 과정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 해외 입법 동향 비교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중개서비스를 통해 불법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플랫폼에게 의무 부과, 맞춤형 광고,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 강조, 불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주의의무 중심으로 **뉴스미디어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음**
-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와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의무를 규정,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의무를 부과
-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 캐나다 온라인 뉴스 법안(Online News Act)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뉴스 사용자 협상을 강제, 빅테크와 뉴스 산업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개정 논의, FOSTA-SESTA 도입으로 성매매 관련 법 위반 시 면책 적용 폐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증오범죄, 혐오표현, 극단주의 등 면책 특권에 예외를 두거나 플랫폼의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책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논의

**(2)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 정책 혼선**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적기구화 추진? 중단?
  - 2023년 『업무계획』 포털(네이버, 카카오)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 **법제화 검토 및 추진(’23.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2024년 『업무계획』(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
- 입법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비독립성
  -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22.5~22.12)
    - 언론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배제, 정부 관계자 4인 포함
    - 5차례 회의 결과와 위원 명단을 국회 요청에 따라 제출
    - 포털 제평위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면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전제, 법으로 관련 기구를 규정하는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 규제하는 방안이 아닌 강제력 없는 ‘권고’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 (미디어오늘, 2022.11.16)

**(2)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 정책 혼선**

-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2기 명단 및 논의내용 비공개 (23.8~23.12)
- 2024.02.01 [조선비즈] <정부, 포털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  
: "법정기구화 논의 협의체 추가 활동 계획 없어"
- 2024.02.01 [방통위]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2024.03.21 업무계획 일문일답 : "지금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원래대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 플랫폼별로 두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방심위 같은 법정 기구는 아니다."
- 2024.04.18 [미디어오늘] <총선 끝... 국힘 압박에 해체된 포털 제평위 다시 부활하나>  
: 네이버 관계자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고,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 등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  
: 카카오 관계자 "내외부 의견 수렴 중이고, 제평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재개하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

## (2)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 정책 혼선

###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화 추진? 중단?

- 2023년 「업무계획」(포털뉴스·동영상 투명성 확보)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검토 및 추진('23.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2024년 「업무계획」(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맞춤형 추천서비스의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사업자(포털, OTT 등)의 자율준칙 시행,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공개 등 추진

###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비독립성

-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2기 명단 및 논의내용 비공개 (23.8~23.12)

## (2)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 정책 혼선

### □ EU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유럽센터(ECAT)

• 역할 :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사회 과학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간 팀이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기술 분석 및 알고리즘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

•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도 중점

• 주요 감시 대상 : △ 검색 결과에 인종적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는가, △ 미성년자들에게 중요한 음성 지원 기술 어떻게 설계되는가, △ 소셜 미디어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얼굴 인식 알고리즘 문제

### □ 시사점 (김민정, 2023,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재 방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알고리즘 공개의무가 '이용자보호'나 '미디어의 독립과 자유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안인지 논의 필요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기사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 관련 투명성 의무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

•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 입법자들은 법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달성목표와 사용가능한 정책 옵션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옵션의 영향을 비교, 평가한 후 정책을 제안해야 함.

39

(3)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체계,  
'자율규제'인가?

□ 추진과정

2023.08.25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2023.09.04 이동관 방통위 (전 방통위원장 과방위 출석 발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023.09.06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TF 가동

2023.09.08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 호선

2023.09.13 방통심의위 법무팀 인터넷매체 심의 불가 검토의견서

2023.09.15 방통심의위 법무팀 인사발령

2023.09.18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패스트트랙 가동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

2023.09.20 네이버, SNU팩트체크센터에 서비스 중단 통보

"8월 초 마지막으로 대면 미팅을 했다.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다. 돈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지원을 계속 한다면 어디까지 피해를 봐야 할지  
두렵다고 했다." "페이지 관련해서 9월20일 네이버한테 통보 받았다.  
국정감사 전에 내려야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추석 연휴 전에 (센터와  
연동된) 페이지가 사라졌다."

39

40

(3)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체계,  
'자율규제'인가?

2023.09.20 방통심의위 법무팀 인터넷매체 "심의 가능"으로 변경

2023.09.21 방통심의위 인터넷연속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 및  
해의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

2023.09.25 방통위, 네이버의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네이버, SNU 팩트체크 서비스 종료

2023.09.26 네이버, 방통심의위 긴급심의 대상 기사에 '심의 중' 표기 시작  
방통심의위,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현판식

2023.09.27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현이체' 출범

40



### (3)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체계, '자율규제'인가?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인권기준에 반하는 언론의 자유침해적 정책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아니다.”
-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를 사법적인 적법절차 없이 정부 행정기관이 삭제·차단여부를 결정하여 제한 (협조요청?)
- 직접 뉴스를 생산한 자가 아닌 디지털 회사가 자율규제의 주체가 되어 인터넷상 유통되는 뉴스에 개입
-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governance)의 의견 수렴절차도, 투명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조치를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2023. 10. 13. 김보라미 변호사, 언론노조/언론연대 [토론회]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 (4)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검토

#### 방통위 보고서

- <참고> 가짜뉴스(disinformation)의 정의
- (EU) 명백히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디지털서비스법 실천강령)
  - 경제적 이익 또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이기 위해 제작·유통되는 정보
  - 민주적 정치·정책결정 과정 및 EU 시민의 건강·환경·안전 등 공익에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됨
  - (UNESCO) 거짓정보(dishonest information)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조종하려는 정보

#### 검토내용

- (EU) DSA 실천강령의 “명백히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아니라 실천강령이 목표로 삼는 정책대상(과제)을 지칭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의 개념에는 보도 오류, 풍자 및 패러디,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파적인 뉴스 및 논평은 포함되지 않는다”
- (UNESCO) 법적 규제를 위한 개념 정의가 아님. 유네스코는 저널리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
- 특히 유네스코는 “가짜뉴스(fake news)는 검증 가능성과 공익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즉 진짜 뉴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모순된 개념”

### (4)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검토

#### 방통위 보고서

-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
-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도, 소관 법률(방송법, 방통위설치법) ⇒ 시행령 ⇒ 심의규정에 따라 방심위가 적법한 심의 가능.
- 방심위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 헌법재판소는 1)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신심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
  - 2)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 행위보다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

#### 검토내용

- 통신심의규정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통신 내용'은 허위성, 고의성, 악의성 등을 요구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음.
- 현재 판례
  - 1) 현재는 방법의 불법, 유해정보 규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합헌적으로 해석. 정보통신망법 '불법, 유해정보' 조항에는 이른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이와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없음.
  - 2) 판례2의 경우, 2인의 소수의견(재판관 이동훈, 목영준)만 일부 발췌하여 판결문의 전체 취지를 오도함.

### (4)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검토

#### 방통위 보고서

- 신문,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 근거
-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가능 (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4호)
-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
- 언론중재위와 방심위 심의의 중복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가짜뉴스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가짜뉴스는 방심위가 신속·통합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하고, 언론위는 개인의 피해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검토내용

-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언론사의 지위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법체계상의 문제는 특별법을 우선하는 논리에 의해 인터넷신문은 특별법인 언론 관계법을 적용해야 함.
-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 이용정지, 해지 등'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제재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언론 규제 수단으로 부적합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 기사에 적용할 경우 정정, 추후, 반론보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언론중재제도와 충돌함. 이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우선하여 신문법·언론중재법을 통해 규율하는 체계를 유지, 방심위 출범 이후 인터넷 언론의 기사를 통신규정에 따라 심의한 전례가 없음.



#### (4)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검토

##### 방통위 보고서

- 해외사례
  - 우리 정부가 포털·플랫폼 등에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과 유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23.8) 이후 최초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스라엘-하마스 戰' 테러선동 콘텐츠와 가짜뉴스 관련 조치 방안 보고 요구
  - 영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당국(Ofcom)이 정보요구 및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의회 통과 ('23.9.19)

##### 검토내용

- EU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언론 보도나 '가짜뉴스'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는 걸 주요 목적으로 함.
-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 발행자 및 저널리즘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함. (18 Duties to protect news publisher content / 19 Duties to protect journalistic content) 저널리즘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일반 정보로 간주하는 방통위와는 완전히 상반됨.

#### (5) 방송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로 공익성 제고?

-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국가 공권력이 심의하는 제도의 문제점
  - 공정성은 방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정책적 지향이지만 그 모호성으로 인해 규제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비판)언론을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더군다나 공정성 심의·평가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허가·재승인 여부)에 반영하는 제도는 언론의 존립을 위협하여 심각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킴.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부관을 통해 보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초래함.
  - 원칙상, 국가기관에 의한 공정성 심의와 제재는 반헌법적인 것으로, 현행과 같이 △ 모호한 기준에, △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여 △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큼.
  - 방송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언론 자유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제도를 (재)구성해야 함.
  - 방송의 공정성은 규제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음. 방송의 결과물이 아니라 방송 제작 및 편성 과정에서 중사자,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합리적·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함

47

---

### (5) 방송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로 공익성 제고?

- 벌점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
-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받아야 재허가, 재승인 통과
- 3월 12일 기준, 2020년 12월18일(재승인 시점)부터 2024년 3월12일(자료 제출 기한)까지 MBC가 방송심의위로부터 받은 법정제재는 총 28건, 방송평가 감점 합계는 총 76점, MBC TV 관련 법정제재의 약 69%, MBC 라디오의 경우 모든 건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발생 (2024.03.20, 미디어오늘, 윤유경)

채널	2019-2020	2021-2022
KBS TV	646.3	700.6
KBS 2TV	646.3	697.98
KBS	647.2	696.4
MBC	618.3	670.41

채널	2019-2020	2021-2022
TV5	653.4	699.42
MBC	663.4	692.95
JTBC	714.9	714.9
MBN	640.5	720.77

2024. 04. 25. 슬로우뉴스, 이정환, <'입들막' 방송심의, 당지를 들면 모든 게 웃으로 보인다>

48

---

### (5) 방송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로 공익성 제고?

-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용의 문제점 :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최악의 퇴행
  - 독립성 훼손 : 대통령과 여당 관련 보도 표적심의, 방통위 하부 조직처럼 운영
  - 반민주적 운영
    - 합의제 원칙 파기 : ‘가짜뉴스 대책’, ‘긴급심의 절차’, ‘과징금 의결’ 야당 추천 위원들과 논의 협의 없이 일방 의결,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 → 방심위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통위법 목적 위배
    - 야당 추천 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 비전문성
    - 최소규제 원칙 위반 :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과징금 부과, ‘사회 혼란 야기’ 심의, 공정성 객관성 조항의 자의적 적용 및 과잉제재 → 방심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한 무지와 무시
  - 위법 위헌성
    - 법적 근거 없이 ‘가짜뉴스’ 심의,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터넷 신문을 심의하는 초법적 심의 강행,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여 인터넷매체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규정 개정 추진
  - 비윤리성 : ‘정부민원’(민원사주) 의혹, 이해충돌위반 등

### (5) 방송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로 공익성 제고?

□ '류희림 방심위' 제재 93%는 정권비판 보도 찍어내기 (2024.01.29. 한겨레, 박강수, 최성진)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 부문 법정제재 현황

자료: 방송위 보도교양 부문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 (2009~2023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실)

\*방송심의규정 8조는 공정성, 13조는 대당·토론회프로그램, 14조는 객관성 조항. 이를 3개 조항은 공정성 심의 조항으로 확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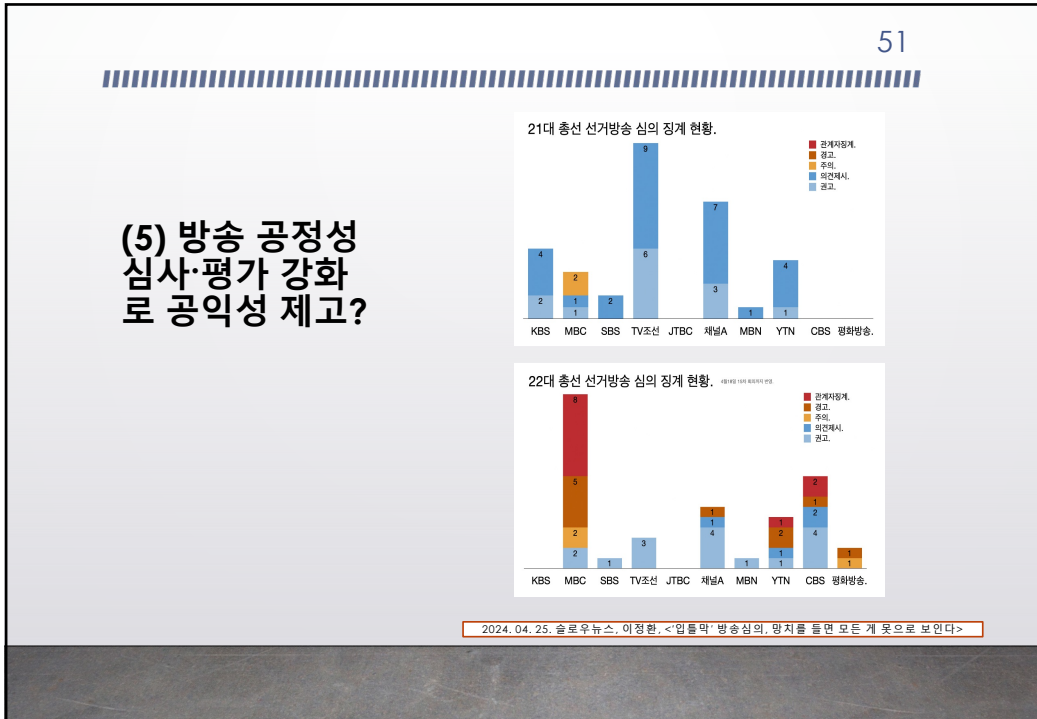
장부	기간	위원장	유죄 적용	유죄-13조·14조 적용	법정제재 합계(건수)
이명박	2009년 5월~(3년)	1기(박영진, 이진경)	17.65%(9건)	29.41%(15건)	1,41건 (61건)
	2011년 5월~(3년)	2기(박만)	8.84%(16건)	33.15%(60건)	5,02건 (181건)
	2014년 6월~(3년)	3기(박효종)	8.24%(15건)	35.16%(64건)	5,02건 (182건)
문재인	2018년 1월~(3년)	4기(강상헌)	5.77%(6건)	48.08%(50건)	2,88건 (104건)
	2021년 7월~(2년 1개월)	5기(정연주)	12.5%(2건)	43.75%(7건)	0,64건 (16건)
윤석열	2023년 9월~(4개월)	5기(류희림)	55.56%(15건)	92.59%(25건)	7,04건 (27건)

### (5) 방송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 로 공익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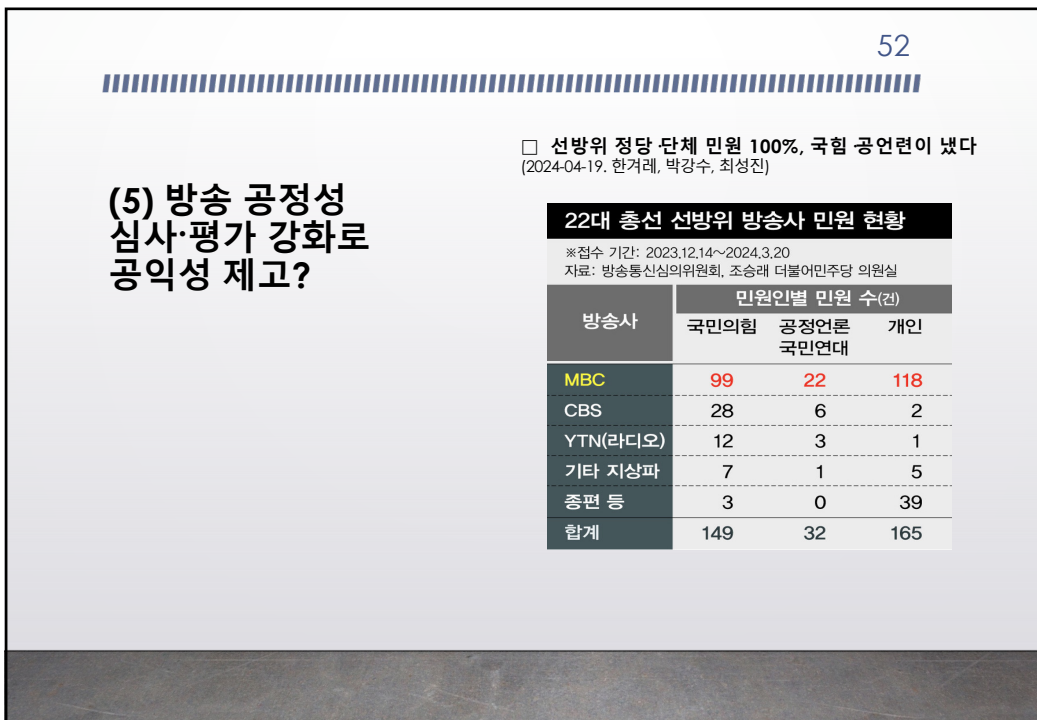
□ '선방심위의 법정제재 18건 '역대 최다'... MBC 11건, 중편 0건 (2024.04.09. 미디어오늘, 박재령)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중징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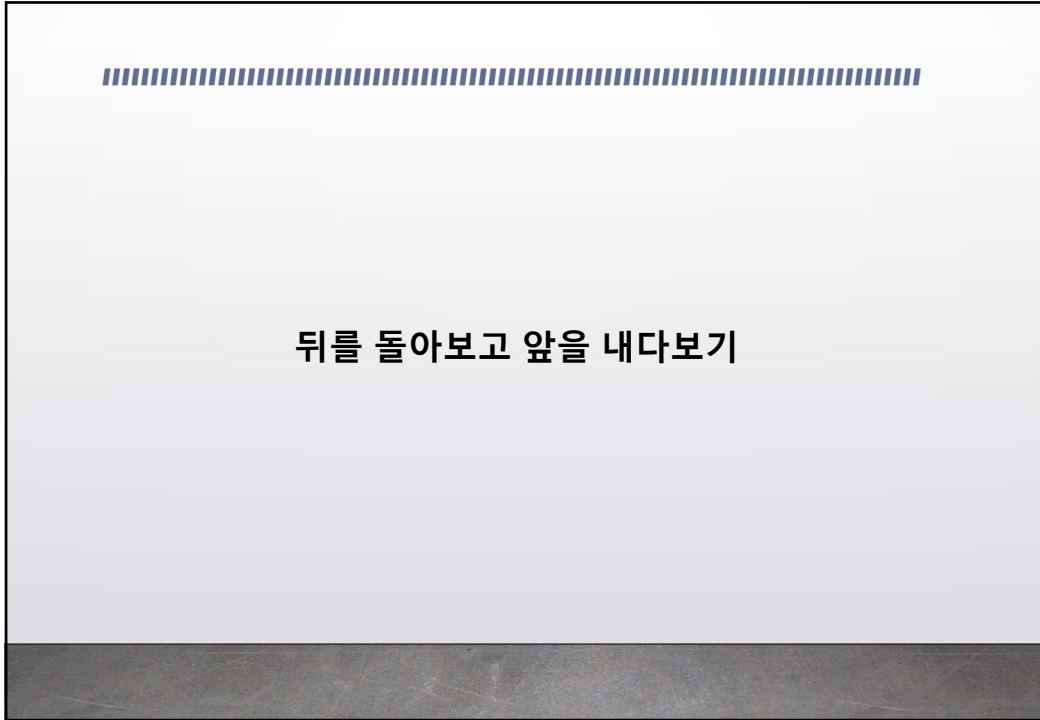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 날짜	위반 조항	제재 수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3년 12월 13일	공정성	관개자신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3년 12월 20일 - 26일	공정성	관개자신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3년 12월 27일	공정성	관개자신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4년 1월 5일	공정성, 여론조사 보도	관개자신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4년 1월 6일	공정성	경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4년 1월 9일	공정성, 객관성	관개자신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4년 1월 11일	공정성	경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피	2024년 1월 17일	공정성, 객관성	관개자신제
MBC	강종배의 시사인용	2024년 1월 15일, 17일, 18일	공정성, 여론조사 보도	주의
MBC	김종배의 시사인용	2024년 1월 29일	공정성	관개자신제
MBC	MBC 뉴스테크	2024년 2월 20일, 27일, 29일	공정성, 객관성, 사실 보도	관개자신제
부산 MBC	MBC 뉴스테크 울산	2024년 1월 18일	행방성	주의
대전 MBC	MBC 뉴스테크 대전	2024년 1월 31일 - 2월 1일	사실 보도	관개자신제
CBS	박재홍의 현판승부	2024년 1월 16일	공정성, 객관성	관개자신제
CBS	박재홍의 현판승부	2024년 1월 17일	공정성, 객관성	관개자신제
cpbc	김재영의 뉴스공간	2024년 1월 30일	객관성	주의
YTN	뉴스팀 박지훈입니다	2024년 1월 2일 - 10일	공정성, 여론조사 보도	경고
YTN	뉴스팀 박지훈입니다	2024년 1월 22일	공정성, 객관성	관개자신제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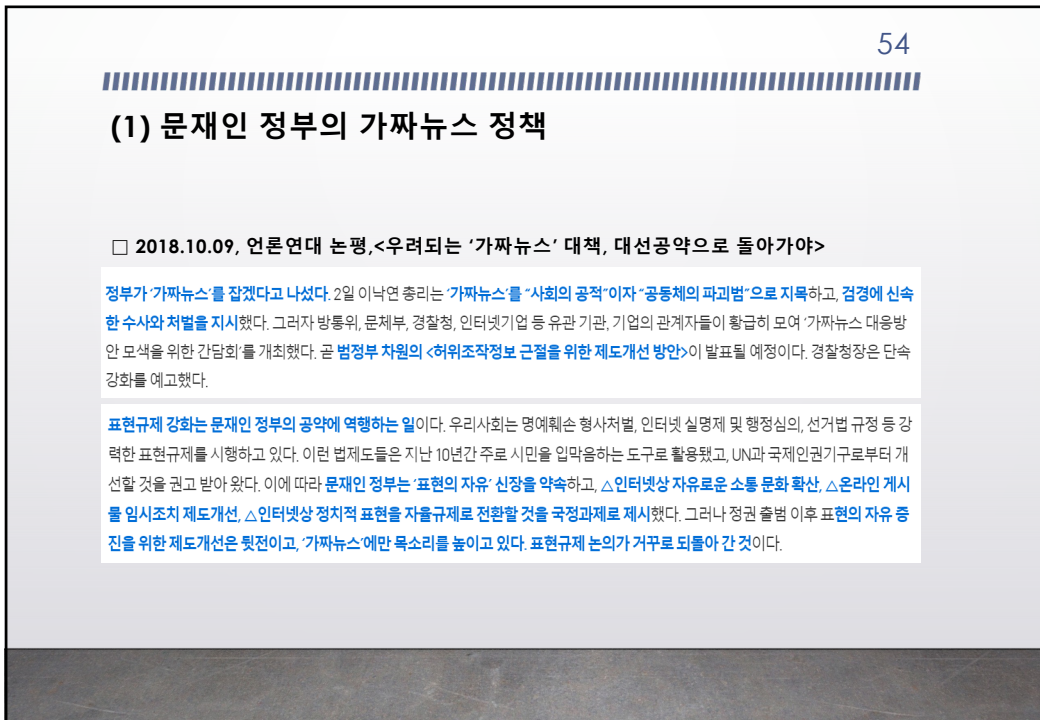


52



##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53



54

### (1)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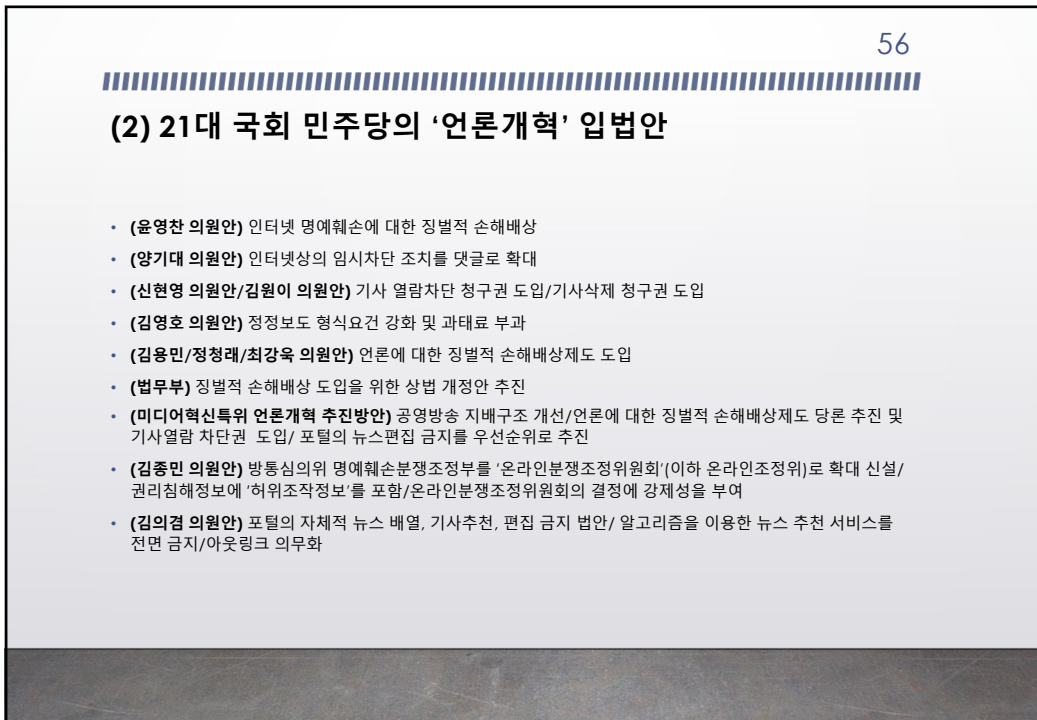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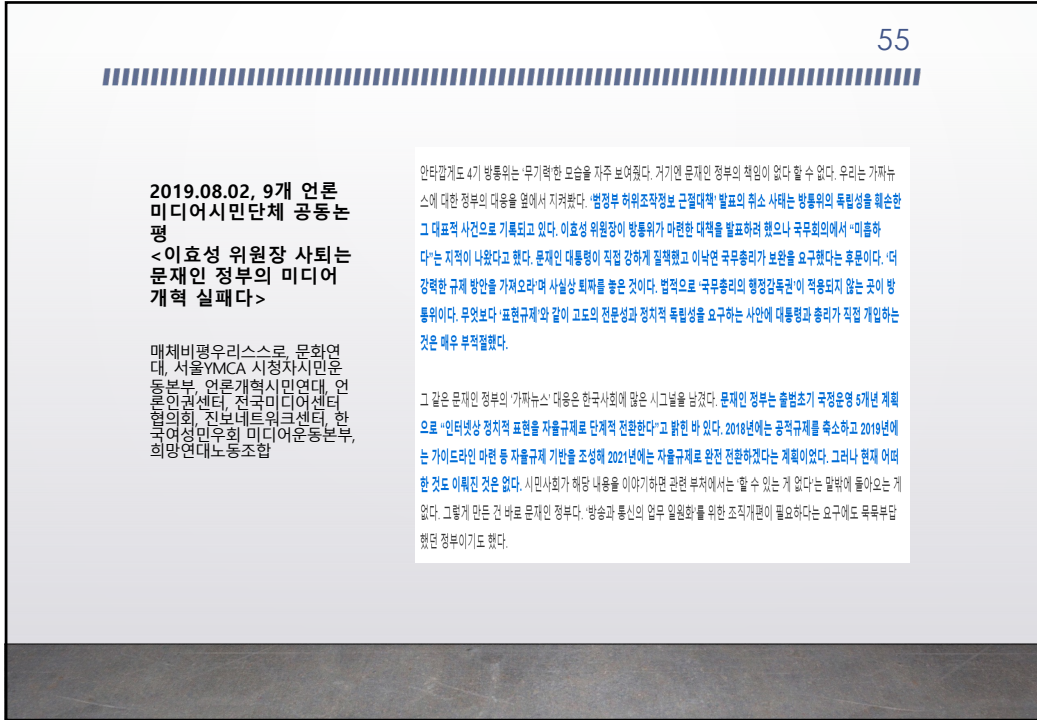
□ 2018.10.09, 언론연대 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 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 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54





**(3) 공정성 관련 법정 제재를 재승인 취소와 연결하는 재승인 조건**

- 2017년 방통위(위원장 최성준) 중편 재승인 조건
  - 오보·악말·편파방송 관련 규정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14조(객관성), 27조(품위유지), 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 2020년 방통위(위원장 한상혁) 중편 재승인 조건
  -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14조(객관성), 21조(인권보호), 27조(품위유지), 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 선거방송심의 규정 4조(정치적중립), 5조(공정성), 6조(형평성), 8조(객관성), 9조(특집기획프로그램), 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2조(사실 보도), 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채널A)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를 포함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것,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 PD 등에 대해 징계규정을 강화할 것
- 공정성 심의를 (재)승인 취소와 연결함으로써 **조직적인 모니터링과 집단적인 민원 제기 증가**

**(4) 정당 민원의 증가, 심의의 정치도구화**

- 연도별 정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접수 현황 (2008~2022) 출처 : 방심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의 힘	0	0	0	0	1	0	0	0	0	803	248	547	202	504	1,369
더불어민주당	0	0	0	0	0	0	36	184	281	102	14	99	257	136	318
정의당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진보당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민생당	0	0	0	0	0	0	0	0	2	12	27	0	0	0	0
총계	0	0	0	0	1	0	36	184	281	906	262	646	459	641	1,687

## 22대 국회를 위한 제언

- '내로남불'이 아닌 '반면교사'로
- 심의를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심의를 언론개혁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 내용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정책이자 콘텐츠 산업정책이다.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언론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낡은 내용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 자율규제도 규제다. 언론미디어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 더 엄격한 (입)법, 더 강력한 처벌은 실패한 처방이다.(병보다 치료법이 더 나쁘다!) 혐오와 차별, 허위조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표현의 자유다.

감사합니다







